

북한 지역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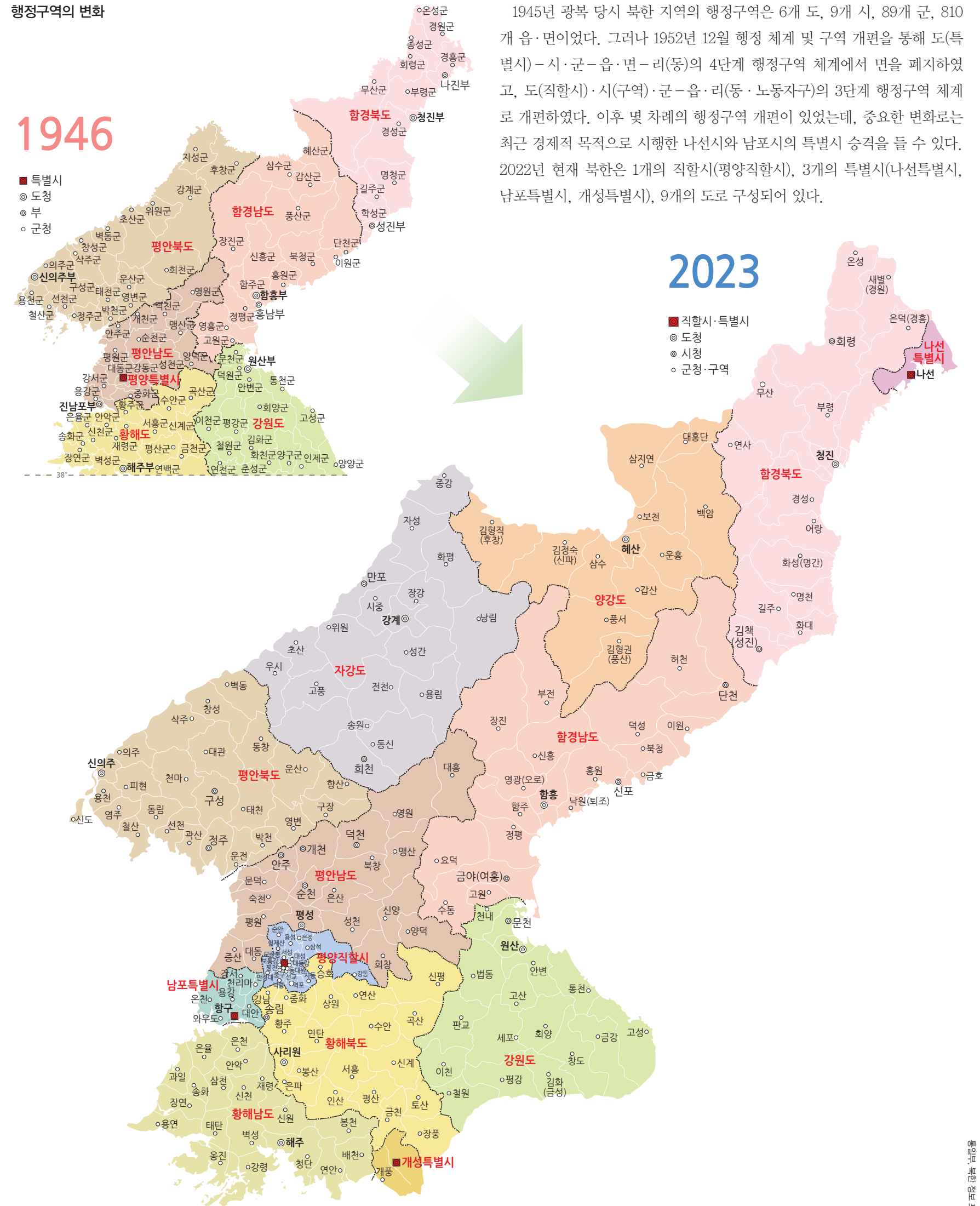
북한 지역 현황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24년 현재 약 2,587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2023년 기준 남한 인구 밀도 514.4명/km²의 40% 수준인 208.9명/km²이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접해 있다. 극동은 나선특별시 선봉 구역 우암동,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비단섬), 극남은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이다. 북한-중국 국경은 대략 1,300km에 이르며, 백두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하천 경계이다. 러시아와는 나선특별시 동쪽으로 약 16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과 자연지리

행정구역의 변화



북한 행정구역 현황

구분	시·군·구역·구·지구					읍·리·동·노동자구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	2	19	-	-	2	80	294	12
나선특별시	-	-	2	-	-	-	-	35	-
남포특별시	-	2	5	-	-	2	50	76	9
개성특별시	1	-	2	-	-	-	33	31	-
평안남도	5	15	-	-	-	15	302	115	46
평안북도	3	22	-	-	-	22	422	87	44
함경남도	3	16	7	-	-	16	425	158	40
함경북도	3	12	7	-	-	12	242	140	51
황해남도	1	19	-	-	-	19	417	28	18
황해북도	2	18	-	-	-	18	329	51	16
강원도	2	15	-	-	-	15	321	61	10
자강도	3	15	-	-	-	15	205	70	25
양강도	2	10	-	-	-	10	129	33	43
합계	25	146	42	-	-	146	2,955	1,179	314

통계청(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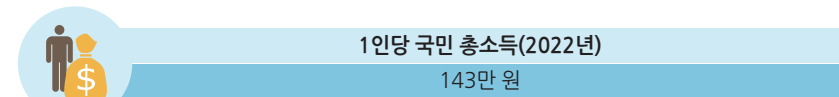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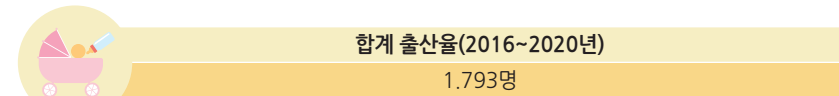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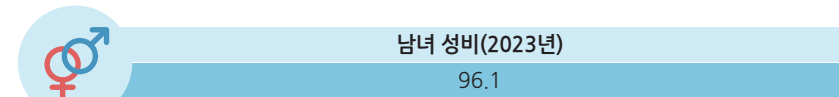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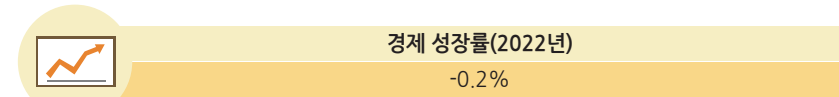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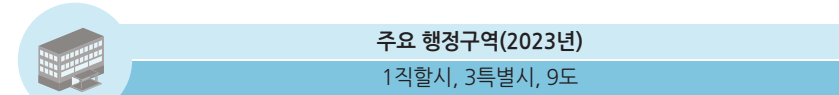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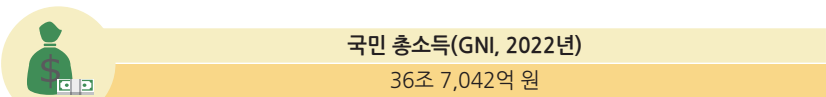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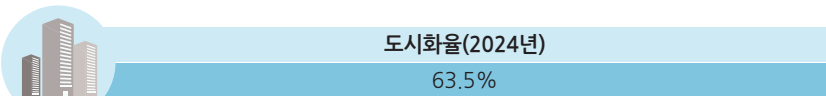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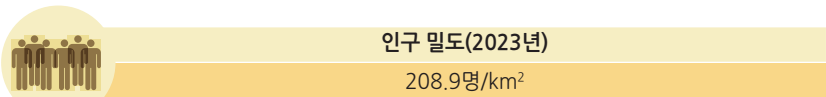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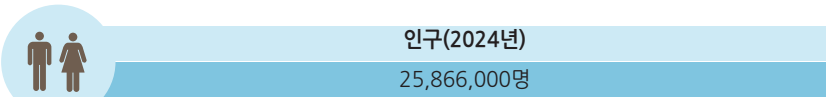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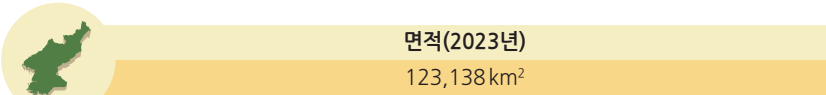
북한 지역의 지형은 기본적으로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가 낮은 동고서저 지형이다.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 등이 있고, 낭림산맥과 함경산맥이 교차하는 지역의 북쪽으로는 개마고원이 위치한다. 주요 하천은 산맥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여 발달하였으며,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등이 서해안으로, 성천강, 용흥강 등이 동해안으로 흘러들어간다. 각 하천의 하류 지역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서해안은 용천평야, 재령평야, 평양평야, 연백평야 등이, 동해안은 함흥평야와 영흥평야 등이 위치한다. 동고서저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남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인다. 북한 지역의 연강수량은 약 600~1,500mm에 이르며, 이 가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북한 지역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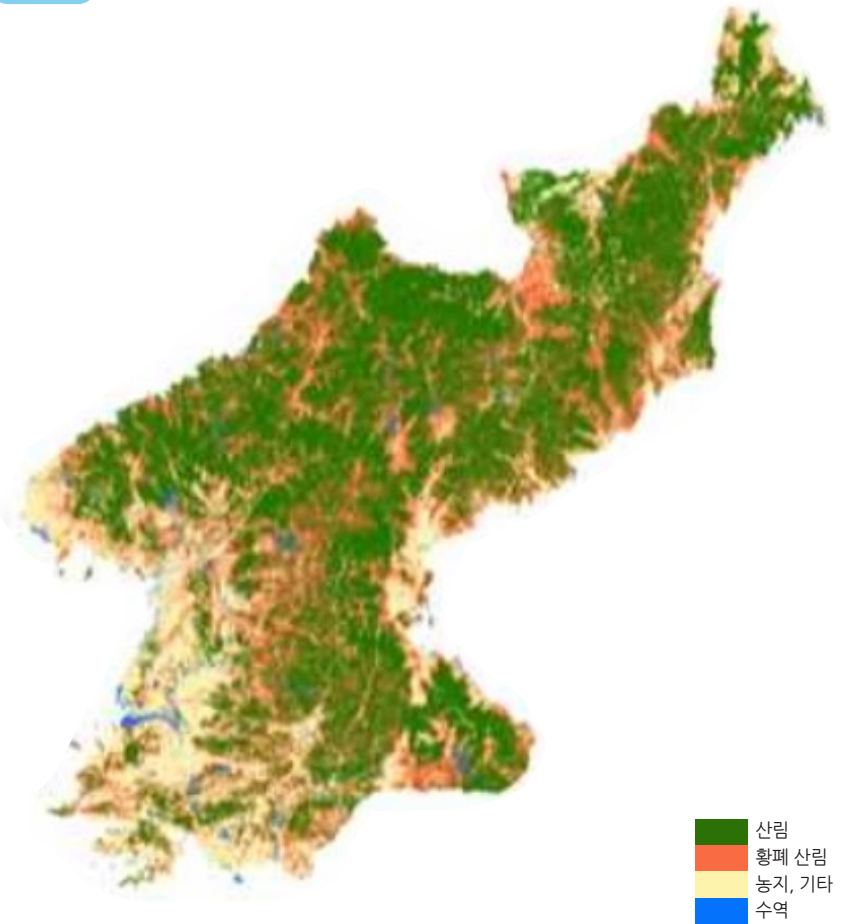
통계청(2023)

시기별 북한의 산림실태지도

1999년



2008년



2018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황폐화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 회담의 결실인 10·4 선언에서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 녹화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산림 당국 간 산림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 단체에 의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북한 전역의 산림 복구를 강조하며 자체적으로 ‘산림 복구 전투’를 진행하였다. 남북 관계의 경색이 완화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남측 정부가 산림 협력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 그린테랑트’ 정책과 2020년 파주시에 준공된 남북산림협력센터 등을 통해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

북한의 인구 및 도시 구조

북한은 1993년 최초로 인구 총조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인구 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1993년 인구 총조사 자료 역시 군 징집 가능 연령(15~30세) 남성 인구에 대한 대규모 누락이 발견되었다는 점,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에서 북한 인구 총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북한의 인구를 추계하고자 시도한 여러 연구 및 통계가 있었고, 2020년 통일연구원에서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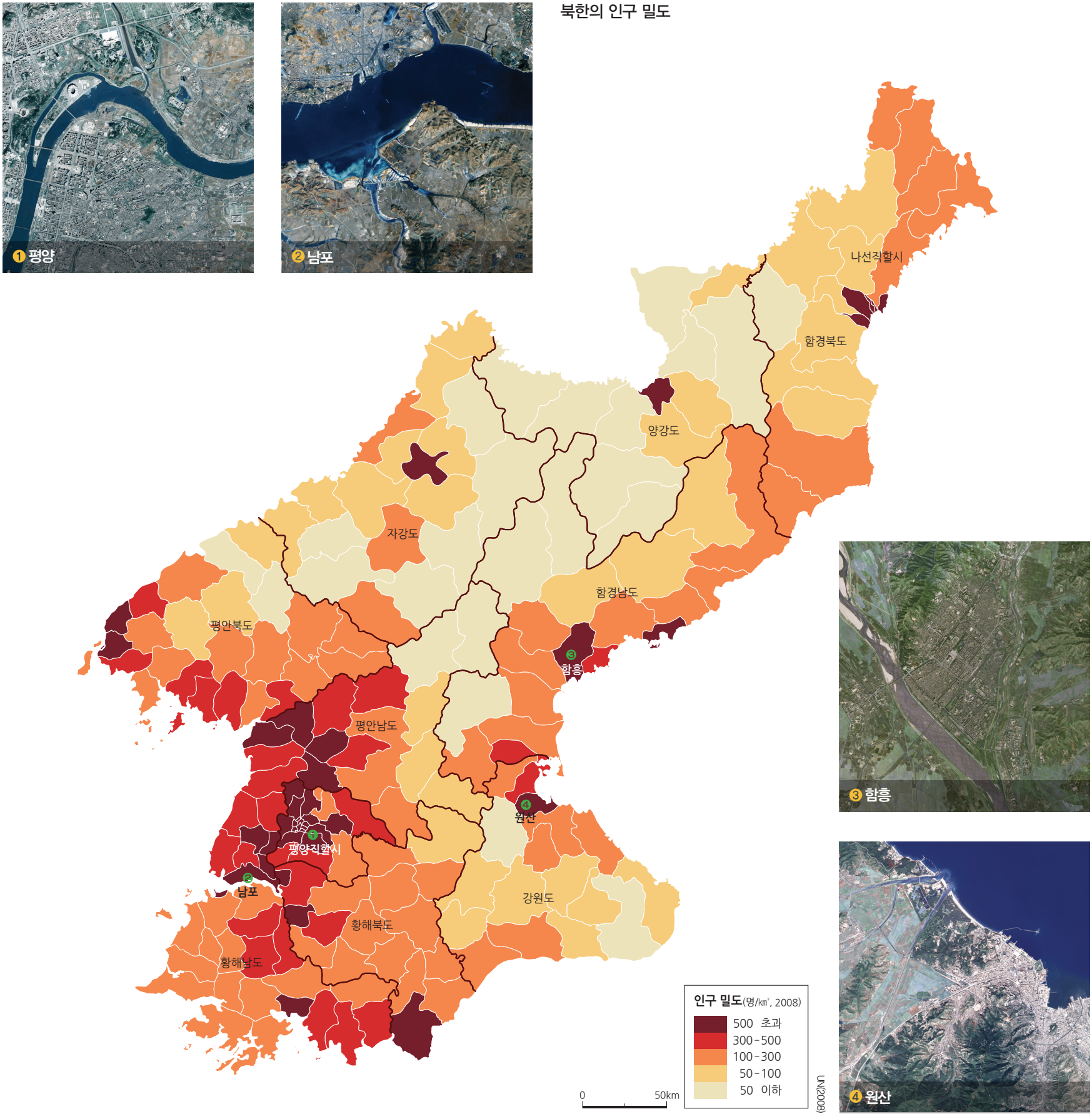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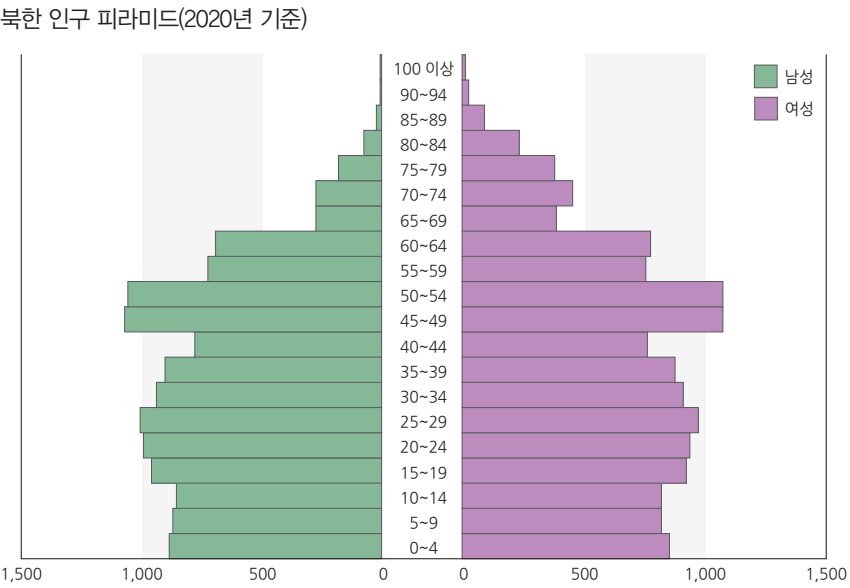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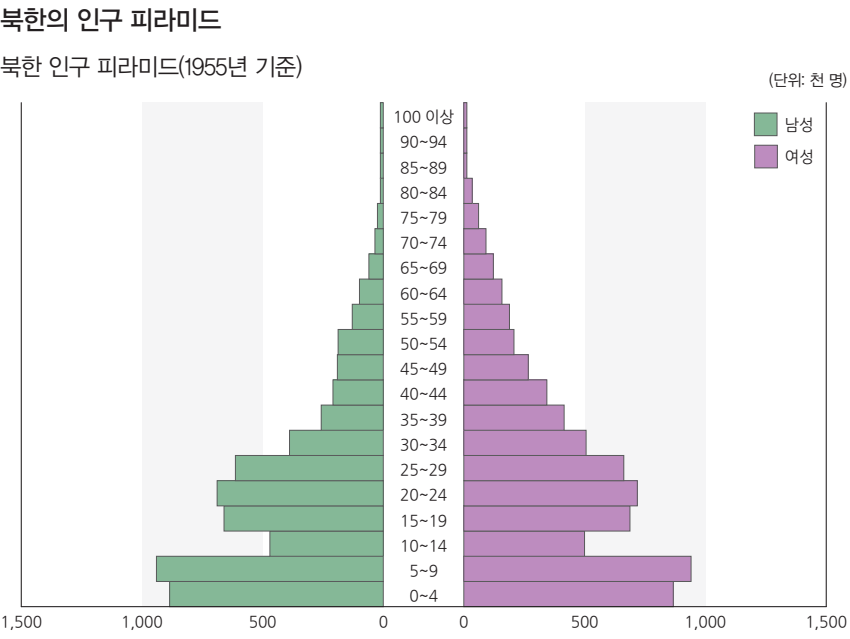
북한 인구 추계 결과 비교 (단위: 천 명)					
연도	북한 공식 발표	통계청 (1998)	통계청 (1999)	통계청 (2011)	유엔 추계치 (2019)
1950	9,622	9,746			10,549
1955	9,359	9,113			10,087
1960	10,789	10,789			11,424
1965	12,408	12,252			12,548
1970	14,619	14,002	14,905		14,410
1975	15,986	16,172	16,646		16,275
1980	17,298	18,170	17,622		17,472
1985	18,792	19,995	19,097		18,877
1990	20,960	21,720	20,221		20,293
1995	22,114	23,261	21,543	21,715	21,862
2000	22,963		22,175	22,702	22,929
2005	23,612		22,928	23,561	23,904
2010	24,345		23,455	24,187	24,549
2015	25,030			24,779	25,184
2020				25,368	25,779

통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복 이후 960만 명에서 1,050만 명 수준의 규모였던 북한의 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 2,00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현재 약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인구는 1950~1953년 한국전쟁과 1994~1998년 고난의 행군 일부 시기 순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고도가 낮고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중국과 국경을 맞닿으면서 육상으로 왕래가 가능한 신의주 지역과 남북경협공단이 조성되었던 개성특별시의 인구 밀도 역시 높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인다. 다만, 북한의 평야 분포, 항구의 발달, 중국과의 인접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내륙 일부 도시 및 동해 연안 지대의 인구 밀도는 높은 편이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원산시 등이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지만, 북한 인구의 이동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북한은 이동 및 거주, 퇴거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당사국이고,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75조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에서는 인민보안기관에 의한 ‘러행 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벌법 제5절 299조에서는 ‘러행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상의 제한에 따라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2008년 기준 약 2,1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5년 전 대비 다른 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는 약 746,000명 수준으로 약 3.4%의 인구만이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 기준 북한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중 출산율의 감소로 10~14세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적고, 전후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0~10세 인구가 많은 모습이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16~64세) 대비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적은 특징을 보인다. 2020년의 북한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꾸준한 인구 성장률을 보여온 결과 베이비 붐 세대가 성장한 45~60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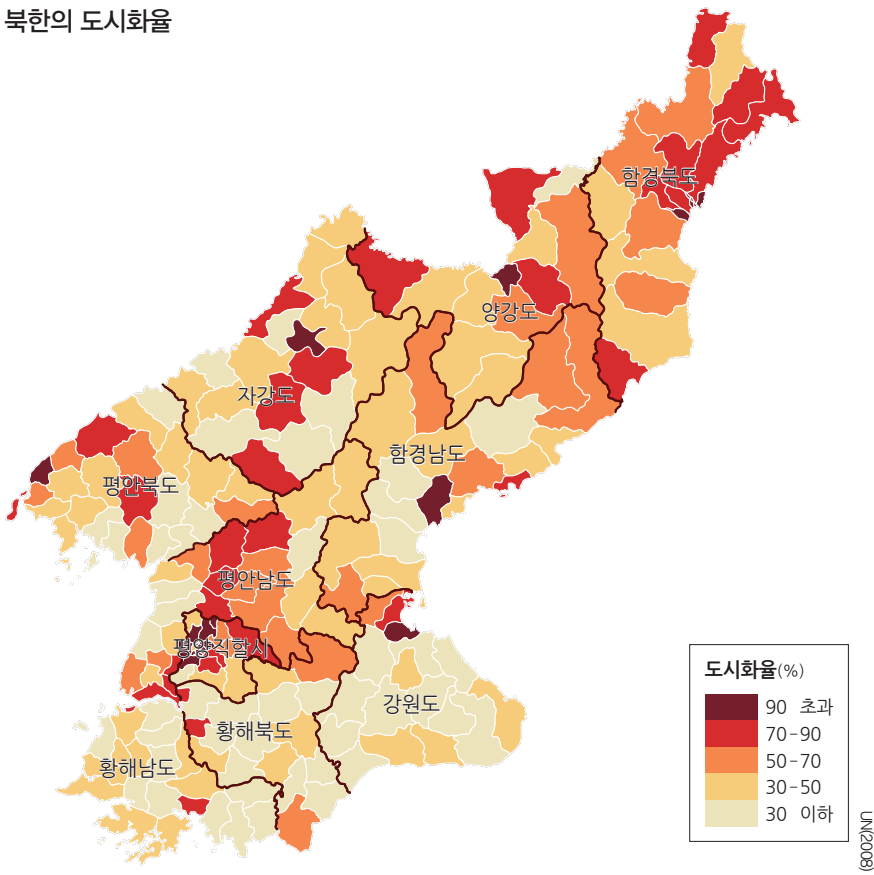
2024년 현재 북한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평양직할시로 약 318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며, 청진(약 65만 명), 함흥(약 53만 명), 원산(약 36만 명), 신의주(약 33만 명) 등의 도시가 그 뒤를 따른다. 현재 북한 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600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약 63.5% 정도이다. 같은 시기 남한의 도시화율은 91.9%로 남북한 간 도시화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이다. 그러나 2018 UN 세계 도시화 전망(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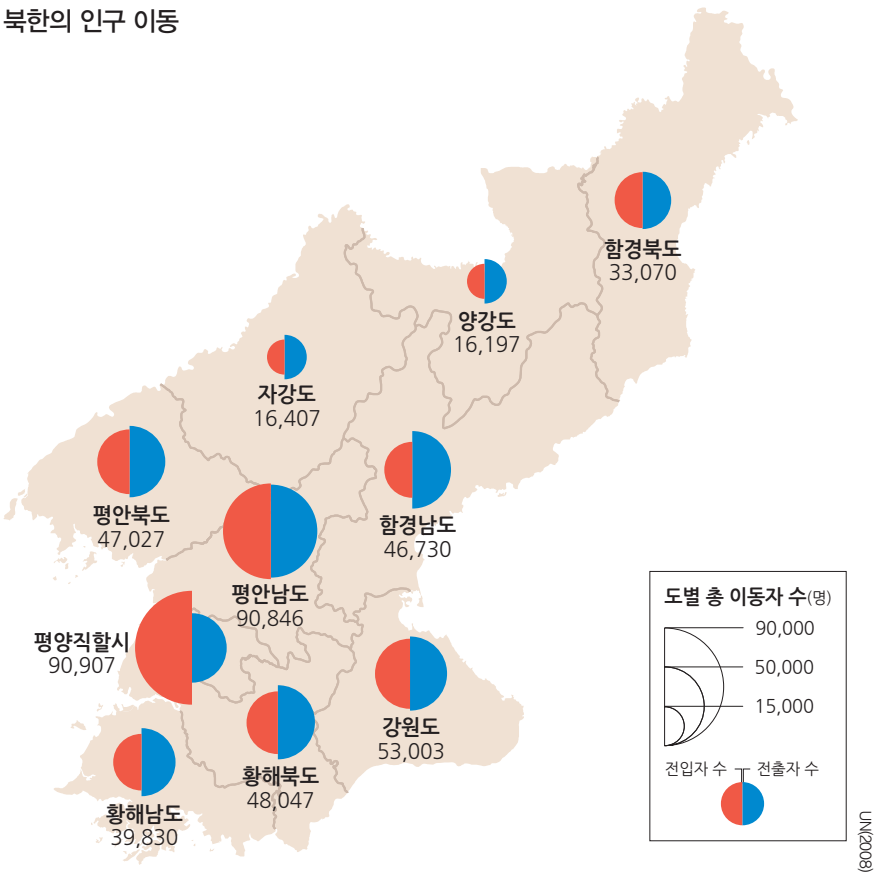
도시화율은 2018년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2041년에는 7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74.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평양—청진—원산—함흥의 순서였다. 1967년에는 함흥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평양—함흥—청진—원산의 순서였으나, 1982년에는 청진이 다시 제2위의 도시로 올라서서 평양—청진—함흥—원산의 순서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시 함흥시가 추월하였고, 남포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2008년 현재 평양—함흥—청진—남포의 도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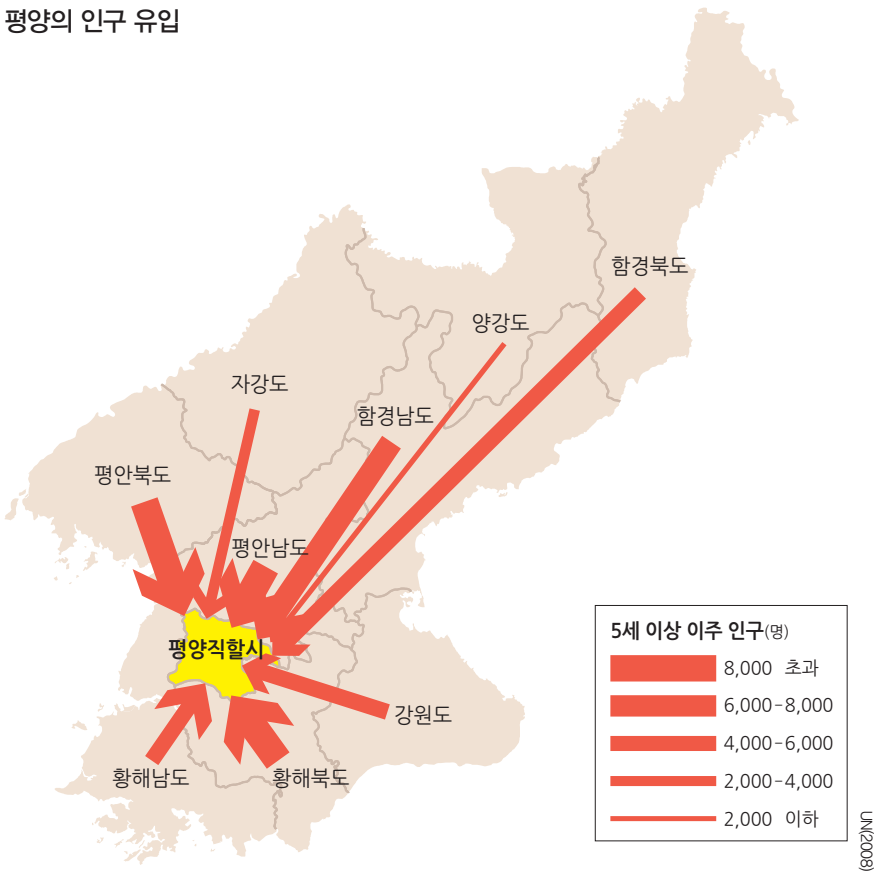
북한의 도시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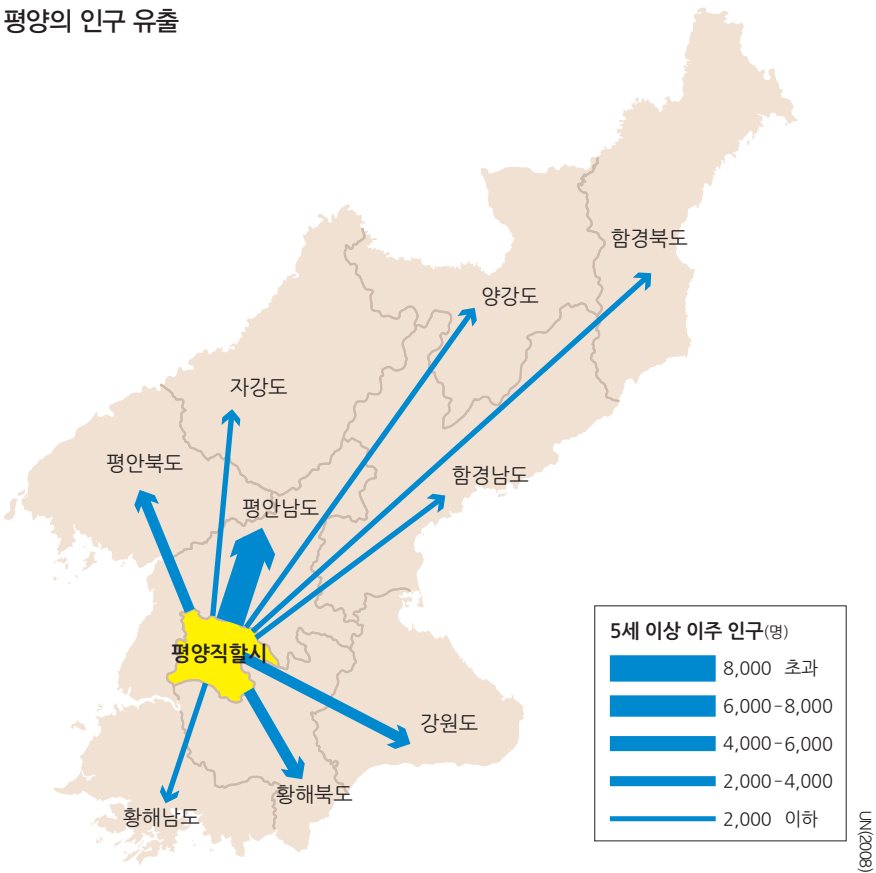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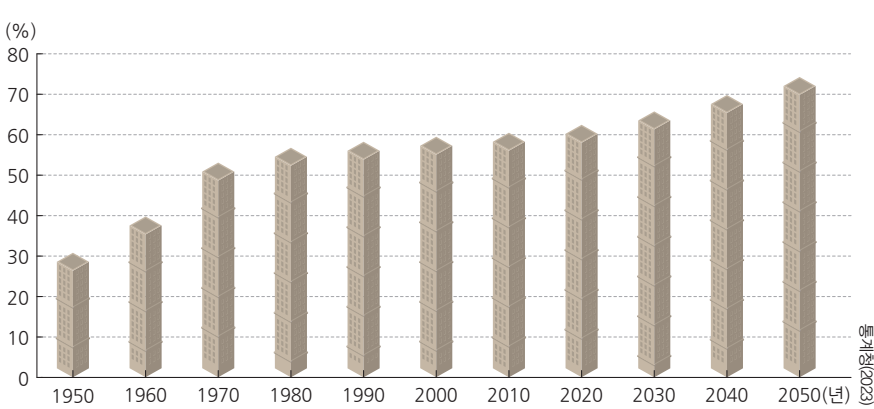
평양의 인구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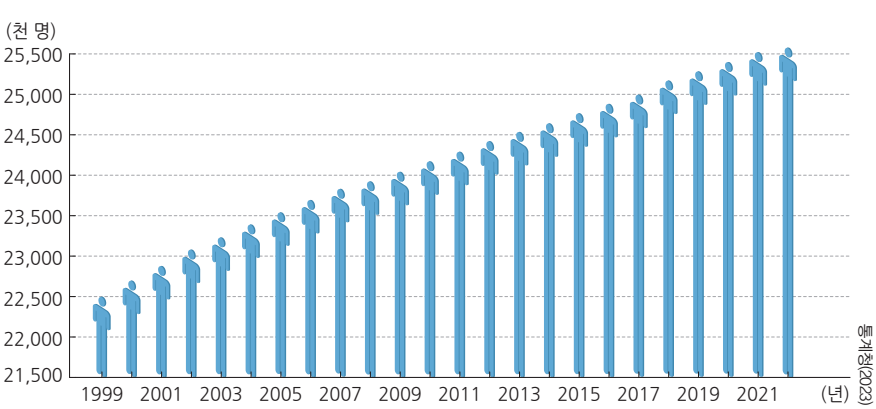
평양의 인구 유출



북한의 도시화율 추이



북한의 인구



북한의 경제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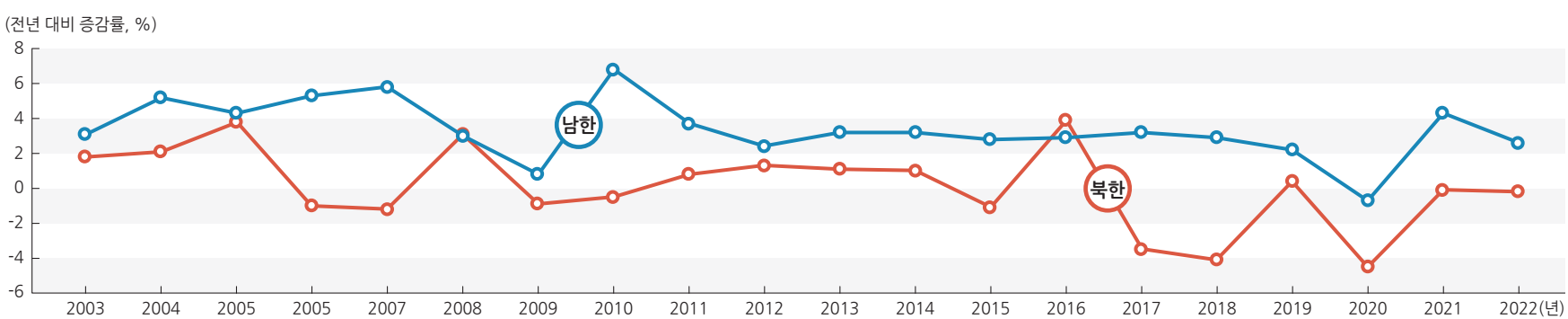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은 사회주의 소유 제도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소유 제도는 사회에 의한 생산 수단의 집단적 소유 체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946년 북한은 토지, 공장·광산·은행 등 주요 산업, 지하자원·산림·수역 등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하였고,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집단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는 경제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계획위원회로 대표되는 중앙 당국에 집중시키고, 당국에 의해 수립된 계획은 하부 조직으로 하달되는 체제이다. 하부 조직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기에 ‘중앙 집권적 명령형 계획 경제’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북한 경제 정책은 시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기조는 유지되어 왔다. 1960년대 김일성 시기에는 크게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 등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을 소화하는 폐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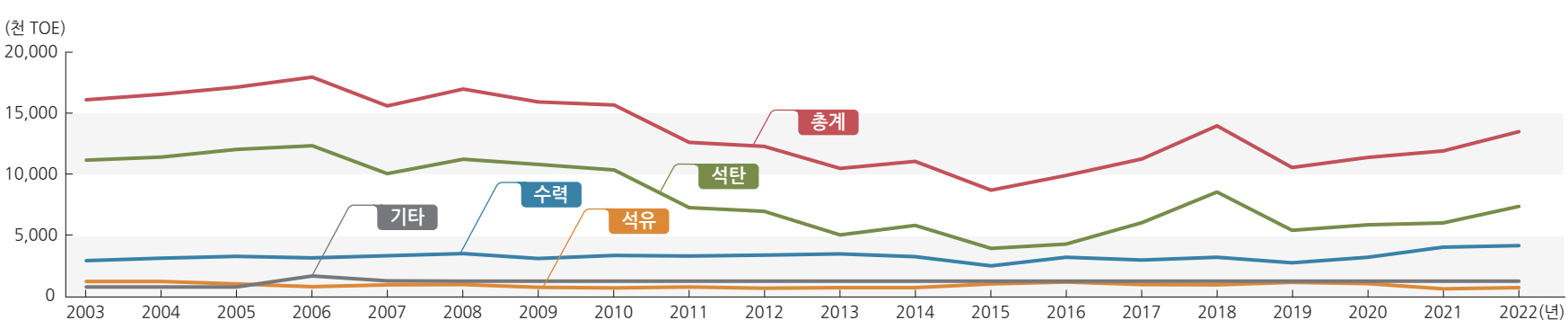
경제 노선은 국제적 분업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았다. 김정일 시기 역시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주요 경제 정책 기조로 삼았고,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군산 복합형 산업 구조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90년대 소련의 붕괴 및 공산권의 붕괴,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경제난 및 식량난에도 이어졌고,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 나갔다.

1999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이다. 김정은은 2013년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 정책 기조로 채택하였으나, 이는 산업의 불균형을 가속하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초래하는 등 북한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022년 현재 -0.2%의 경제 성장률과 143만 원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명목 GDP는 36조 원 규모로, 2,161조 원 규모의 남한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1차 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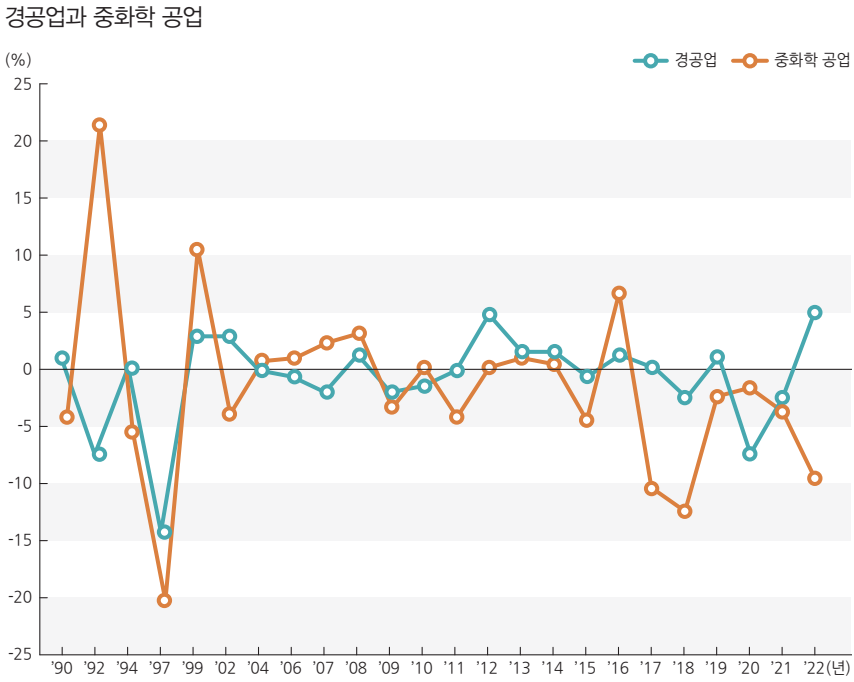


산업 구조는 2022년 현재 농림어업 23.1%, 광공업 30.5%, 전기·가스·수도업 2.2%, 건설업 10.8%, 서비스업 33.4%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 이는 지금껏 이어져 온 북한의 공업 중심 경제 성장 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의 실패와 2016년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강화된 제재(맞춤형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남·북도의 경우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58.1%와 45.6%로 가장 높다.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는데, 이는 북한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남부 탄전, 평남북부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 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편이어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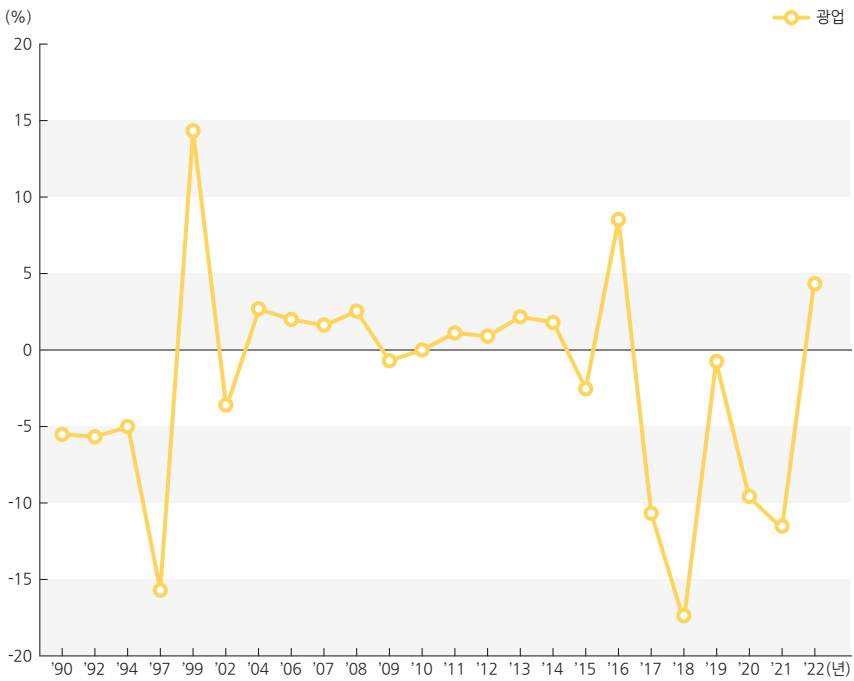
북한은 자력 갱생 정책에 따라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석탄과 수력

에 기대고 있다. 2003년 자원별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은 석탄 69.3%, 수력 18.2%, 석유 7.6%, 기타 4.9%였지만, 2022년 현재 석탄 54.6%, 수력 30.8%, 석유 5.3%, 기타 9.3%로 석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수력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석유의 에너지 공급 비중은 연도별 증감의 폭이 컸는데, 이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국제 제재, 북·중 관계 등 외부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연도별 증감률의 차이는 있지만 2004년 431만 톤에서 2023년 482만 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필요한 총 곡물량을 659만 톤으로 추계하였는데, 오늘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혹은 국제 사회의 원조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의 식량 생산량을 유지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북한의 식량 수입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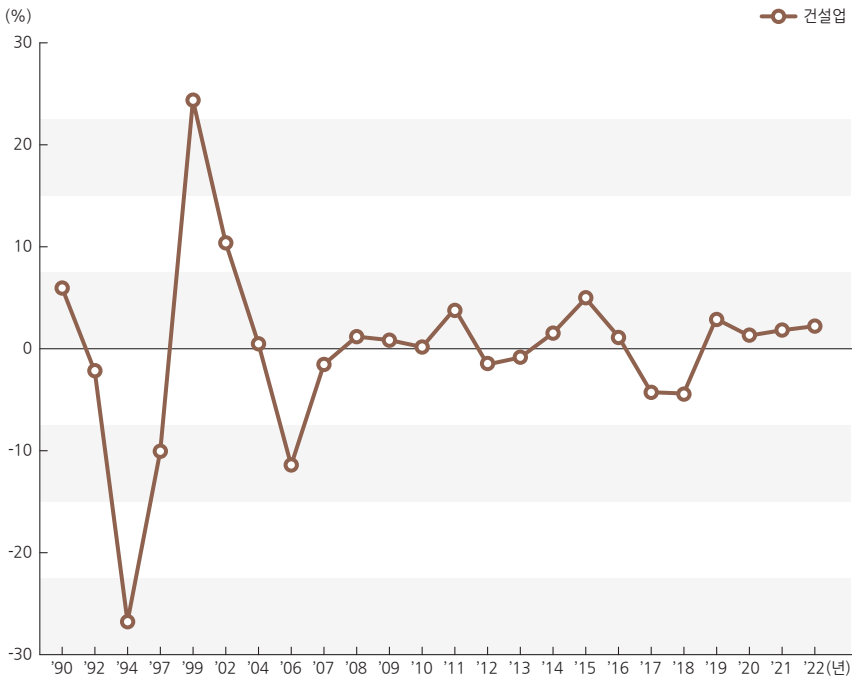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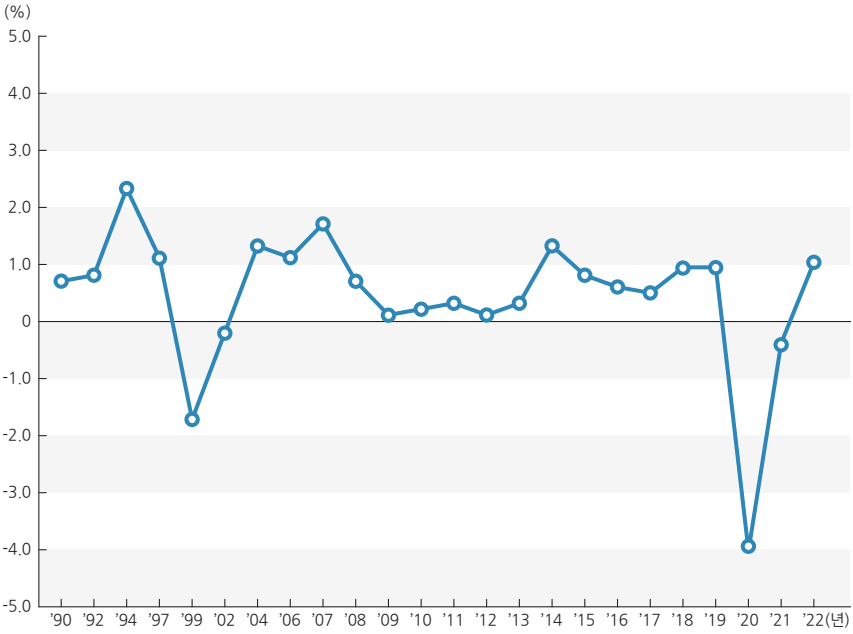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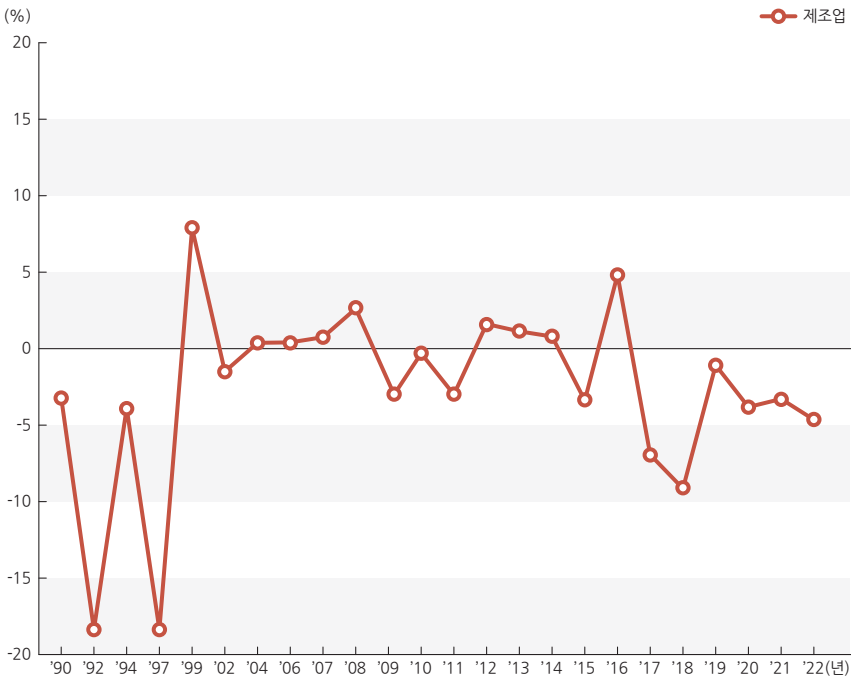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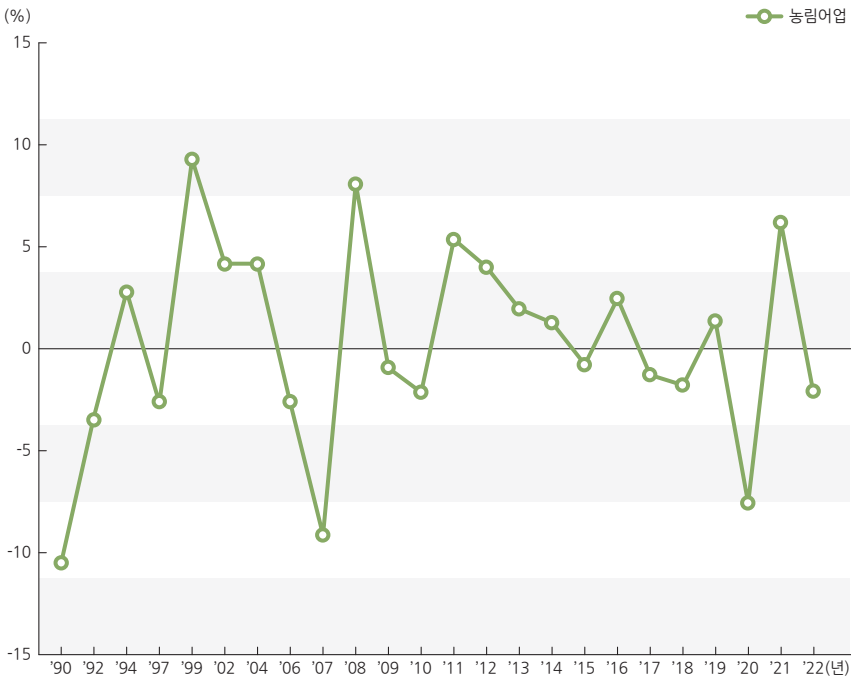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북한의 경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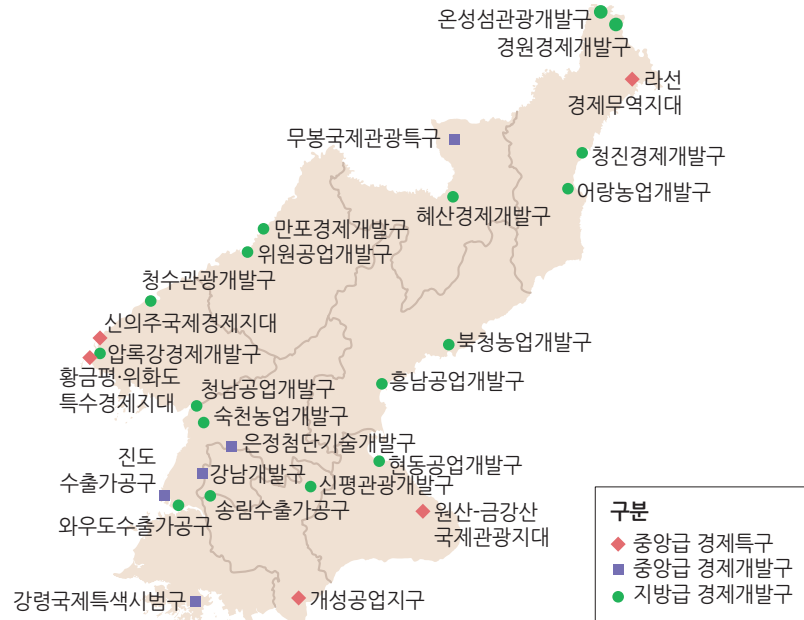


김일성 시대 경제특구

- 경제특구 정책 최초 도입(1991. 12. 28. '정무원 결정 74호')
- 동북아시아의 화물 중개, 수출 가공, 관광, 금융, 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
-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1993.01.31.)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 2000년대 초반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화와 남측과의 공동 특구 개발 및 관리
- 2000년대 후반 북중 관계의 진전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 추진
-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2011년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전면 개정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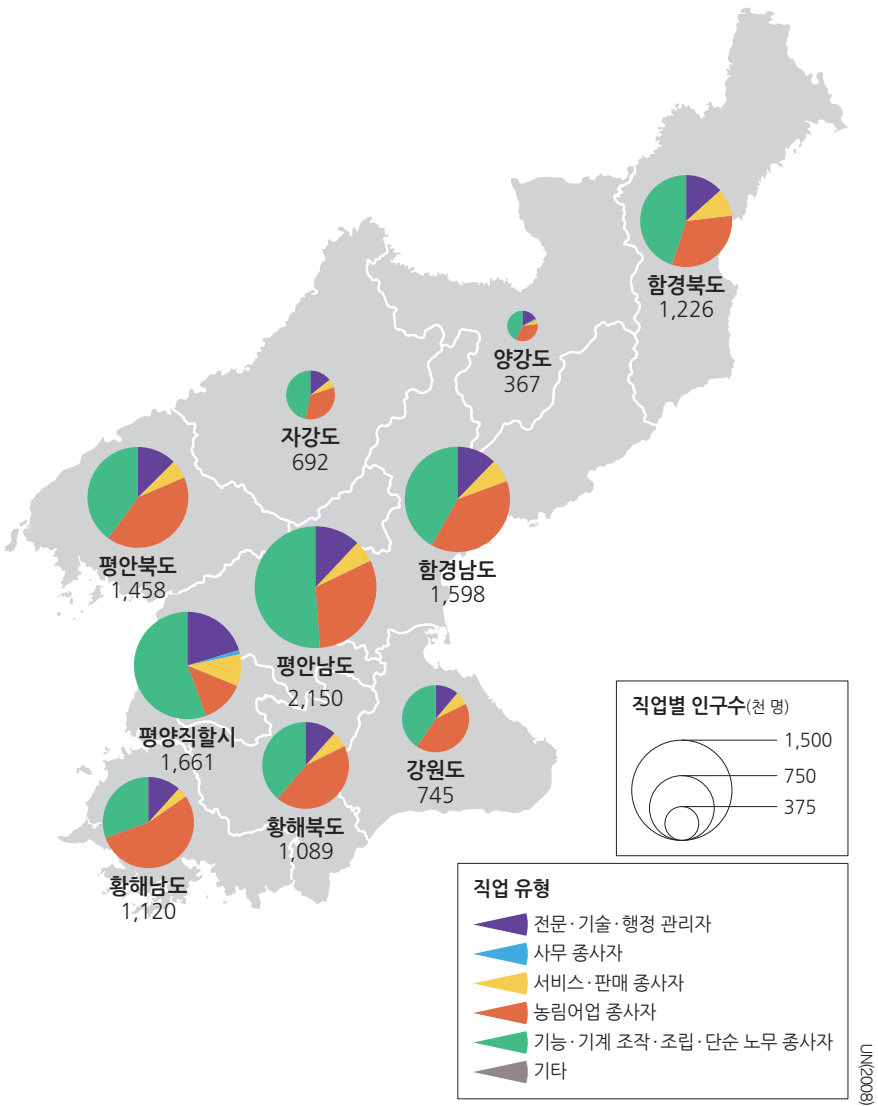
- 2013년 3월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
-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등으로 다양화 및 특화
- 2013년 11월 북한 전역에 걸쳐 13개의 경제개발구 설치, 2014년 7월 6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2015년 무봉국제관광특구, 경원경제개발구, 2017년 강남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였고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대외 무역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북한은 대외 경제 관계를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필수적인 원자재 등을 최소한으로 수입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한계를 느낀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을 제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다. 뒤이어 김정일 체제 하에서 2002년 9월 신의주행정특구, 10월 개성공업지구, 11월 금강산관광지구 등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한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위축되자 북한은 대중국 개방을 확대하였다. 그 일환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2011년 6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대해 중국과 공동 개발 및 관리를 선포하였다.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함께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표로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를,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 2015년 10월 경원경제개발구, 2017년 12월 강남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 개발구와 함께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가공, 첨단 기술 등의 분야로 특화하여 개발 중이며,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북한의 직업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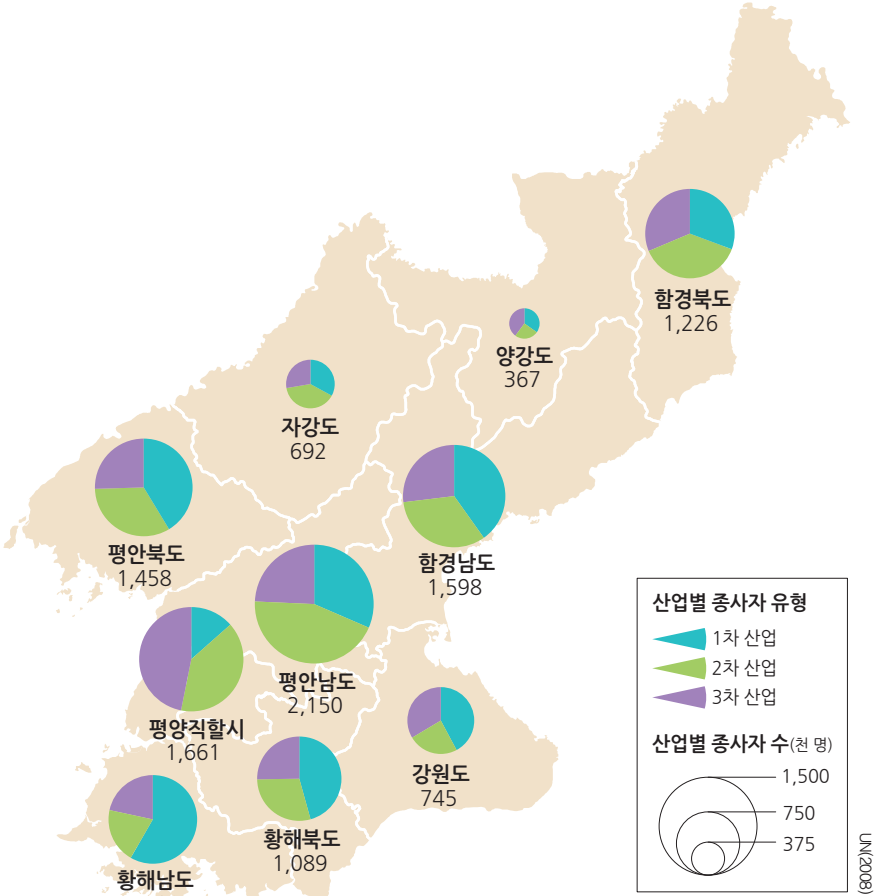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특별시	총 개수
공식 시장 수	68	50	48	46	34	33	5	
도	평양직할시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414
공식 시장 수	31	30	27	18	21	3		

북한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 의한 대북 제재는 강화되었고, 기존의 열악한 인프라와 낙후된 물류 체계 등 내부적 문제,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실패 사례 등이 겹쳐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러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수출입액은 최소 7억 달러에서 최대 76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3,720억 달러에서 1조 4,0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진 남한의 수출입액 합계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이다.

북한의 계획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원활한 공급과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암시장인 '장마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식량과 공산품 등이 거래되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시장화의 부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화폐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 2월부터는 다시 시장 활동 허용 등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북한 전역에서 414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돈주'와 같이 상업 자본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북중 간 공식 및 변경 무역, 밀수 등을 통한 다양한 재화의 유통에서부터 아파트 건설과 매매 등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1988.07.07.	1988.11.14.	1990.08.01.	1990.09.25.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최초 반입 승인 (대우, 도자기 519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2.10.05.	1994.06.20.	1994.11.08.	1995.05.17.	
최초 협력 사업자 승인 (대우)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에관한고시」 제정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경제 인사 방북 및 위탁 가공 교역 기술자 방북 허용 등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 (대우)	
1998.04.30.	2000.09.01.	2001.12.31.	2002.09.18.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 발표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생산 설비 반출 제한 폐지, 협력 사업 투자 규모 제한 폐지 등	제2차 장관급 회담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공동 추진 합의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 기준에관한고시」 제정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2003.08.28.	2004.03.05.	2004.10.31.	2005.06.13.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09.29. 발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경의선·동해선 도로 공사 완료 (12.01. 개통)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 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수송 장비 운행 및 선박 운행과 관련된 기존 고시 통합	
2005.08.01.	2005.08.11.	2005.08.18.	2006.06.06.	
「남북 해운 합의서」 및 「남북 해운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발표	남북 해사 당국간 유선 통신망 연결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7.05.17.	2008.12.01.	2009.10.14.	2013.11.13.	
남북 열차 시험 운행 (12.11. 화물열차 개통)	북한, 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12.01. 조치' 실시 (2009.08.20. 해제)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 회담·방류 사전 통지 등 합의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한·러 사업자 간 MOU 체결	
2014.02.11.-13.	2014.07.15.-22.	2014.11.21.-28.	2014.11.24.-28.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1차 현지 실사(나선 지역)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2차 현지 실사(나선 지역)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나진·포항 석탄 시범 운송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1차 시범 운송	
2015.04.17.-23.	2015.08.05.	2015.11.18.-12.07.	2016.01.06.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2차 시범 운송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3차 시범 운송	북한, 제4차 핵 실험 (03.02.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2016.02.0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02.10.	2018.08.13.-08.20.	2018.11.30.-12.17.	2018.12.26.	2020.06.16.
개성 공단 전면 중단	경의선(개성-평양) 도로 남북 공동 조사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945년 8월 소련은 일본 제국에 선전 포고를 하고 한반도 진공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게 되었고, 1948년 남한과 북한은 각자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이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3년 간의 긴 전쟁 끝에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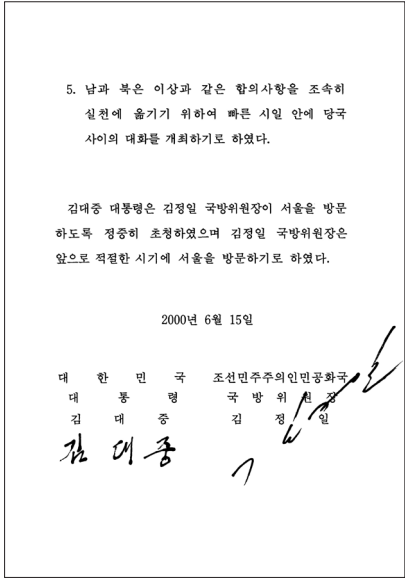
휴전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적 냉전 체제가 공간적으로 발현되는 장이 되었고, 남북 관계는 진영 간 대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한 냉전적 대결 구도는 1990년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해체되었고,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교류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기존까지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고, 해당 회담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

에 대한 기초적 합의를 명시한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등장한 참여 정부 역시 유사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2007년 10월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되었다.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에 대한 합의를 담은 10.4 남북 정상 선언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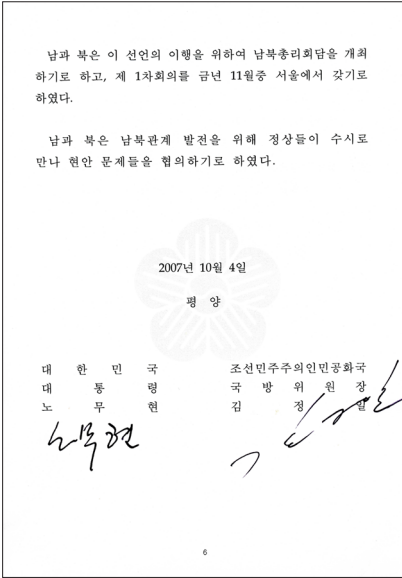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 실험과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을 이어 나갔고, 그에 따른 사상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색 국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고, 북한은 3차, 4차 핵 실험과 더불어 DMZ 폭탄 지뢰 매설 및 서부 전선 포격, 수습 쌀의 미사일·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지속하였다. 특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가 2016년 전면 가동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수많은 시도에 회의적 시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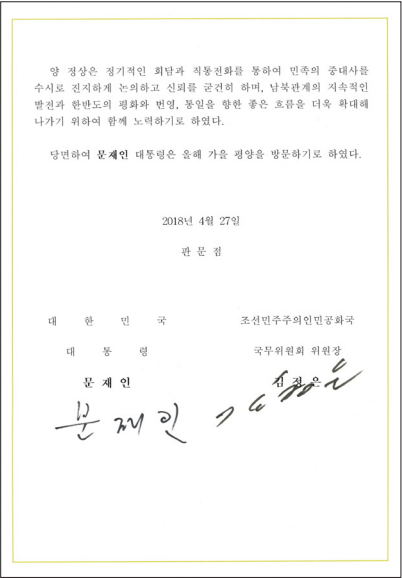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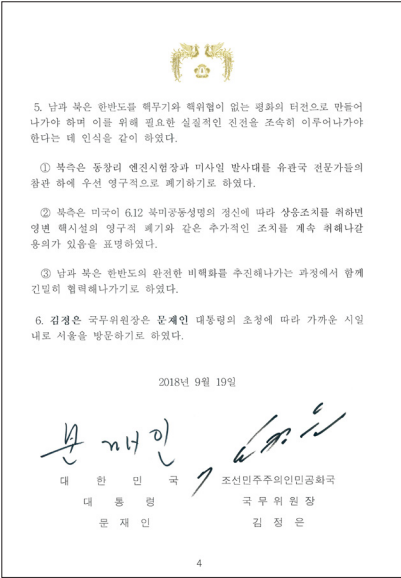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판문점 선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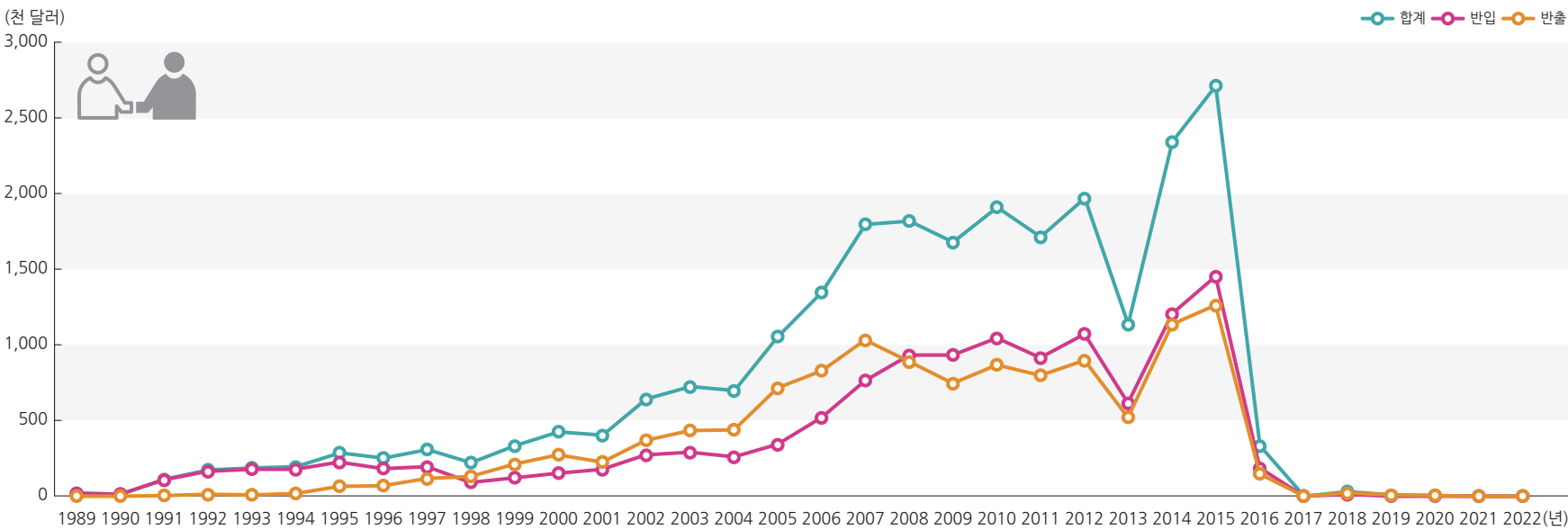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세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9월 평양에서 총 세 차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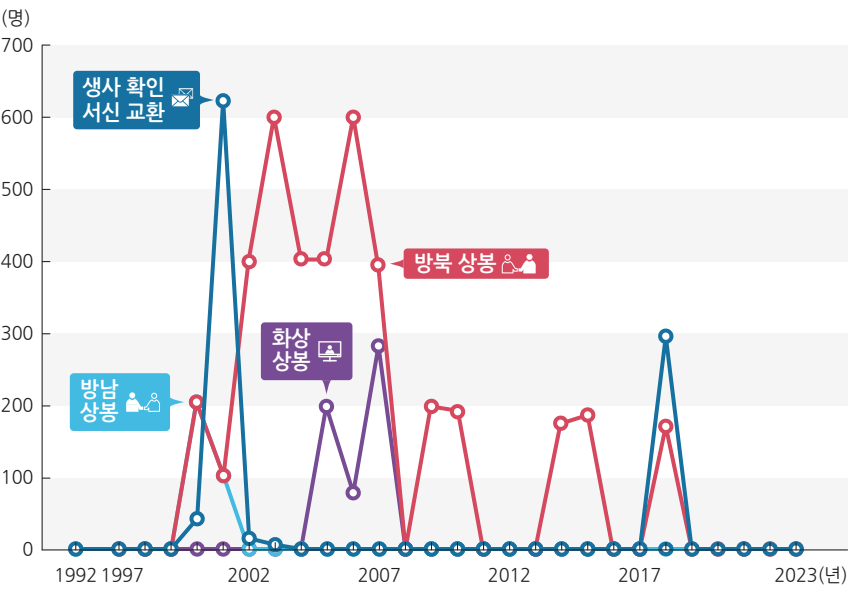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정상 회담에서는 연 내 종전 선언 및 평화 체제의 단계적 구축, 남북 직통 전화 및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남북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네 번째 정상 회담이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다섯 번째 정상 회담은 같은 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를 담은 ‘9·19 평양 공동 선언’과 상호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Guard Post)의 철수, 서해 평화 수역 조성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군사적 합의를 담은 ‘9·19 군사 합의’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2019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정상 회담 결렬(하노이 노딜)

남북 교역 현황



남북 경제 협력은 상품 교역 등의 일반 교역에서 시작하여, 위탁 가공 교역과 직접 투자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반입되는 경우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 등의 사업이 안정화된 2010년부터는 경제 협력(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공업 협력)

이산가족 상봉(당국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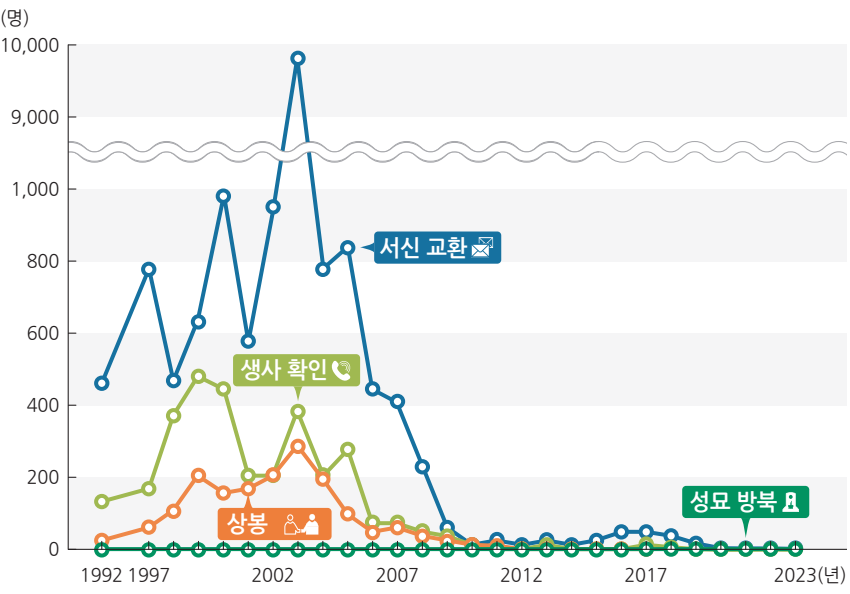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인도적 대북 지원

Table with 5 columns: Year, Government aid, Civilian aid, Food aid, Total. Rows from 1995 to 2023.

에서의 반입액이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남북 경협 초기 비상업적 거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경제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민간 차원)



총 18회의 직접 및 화상 상봉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후 요동치는 남북 관계 속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려웠고, 2018년까지 3회의 상봉이 추가적으로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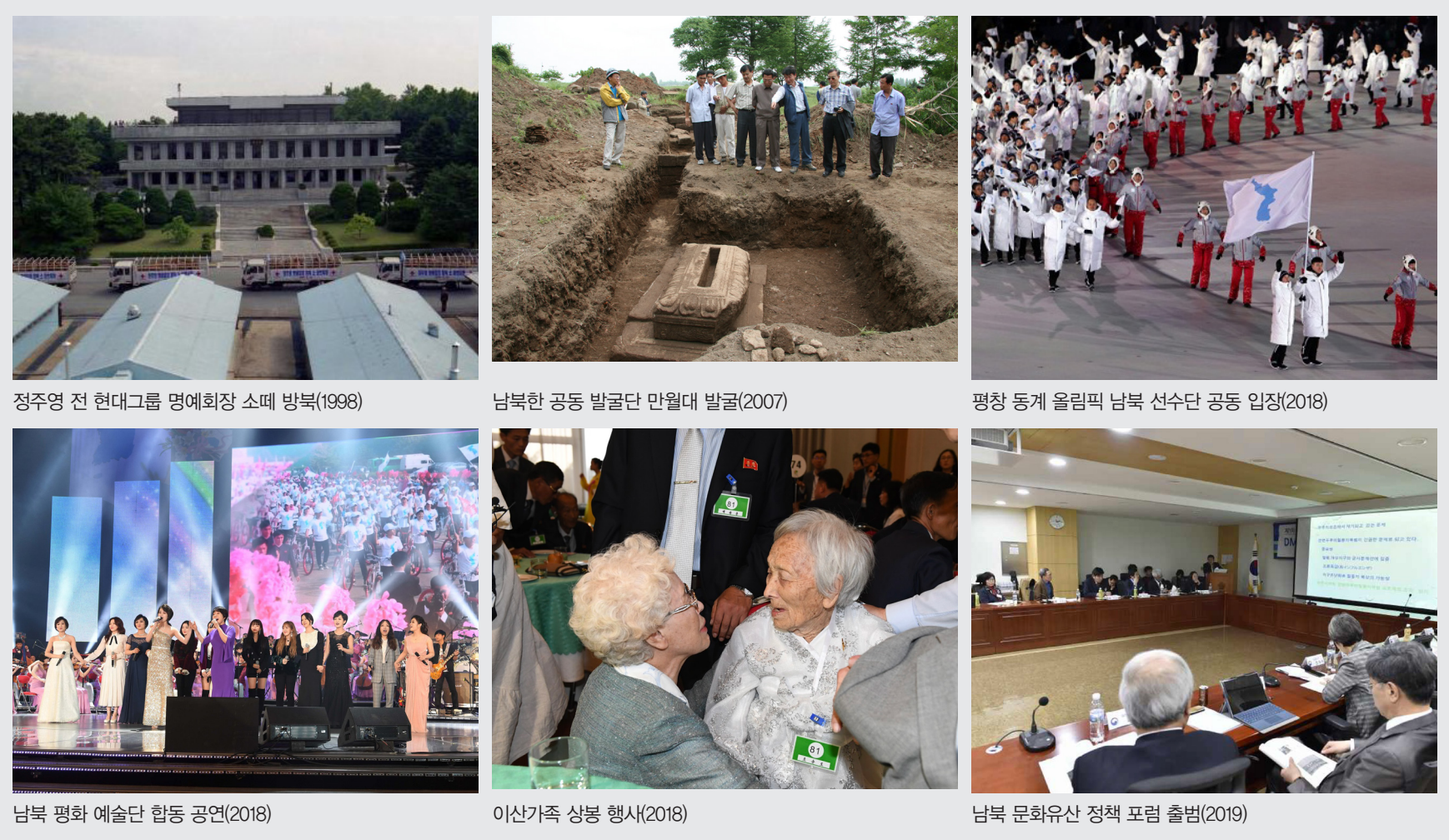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교류는 남북 문화 예술 교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각종 국제 대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루어 출전하기도 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카누 용선팀과 여자 농구팀 등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였고,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남북 예술단의 상호 방문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었고, 2018년 10~12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등 체육, 학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요한 남북 경험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있다. 금강산 관광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북한 측과 체결한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로부터 출발하여 10년 만인 1998년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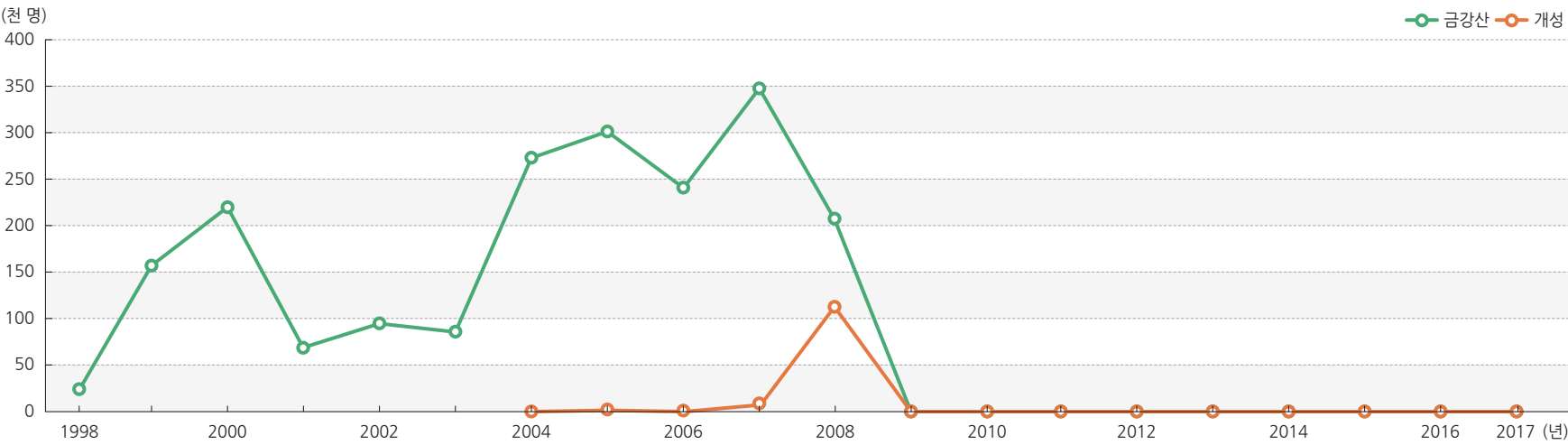
관광이 이루어졌다. 40여 개의 남측 기업과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였고,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누적 관광객 약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개성 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양평화위원회 간 합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m²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5년 업체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로 인해 폐쇄되었지만, 같은 해 8월 남북 간 극적 타협이 이루어져 재가동되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폐쇄 결정되었고, 2024년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이다. 폐쇄 전 개성 공단에는 남북한 근로자 5만 5천여 명과 125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누적 생산액은 32.3억 달러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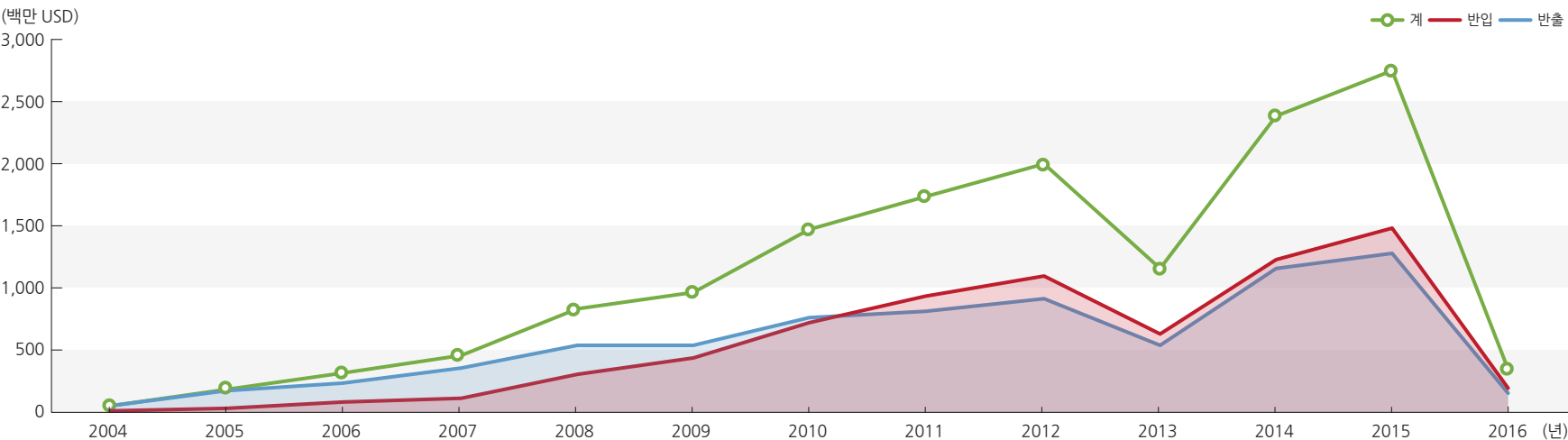
남북 사회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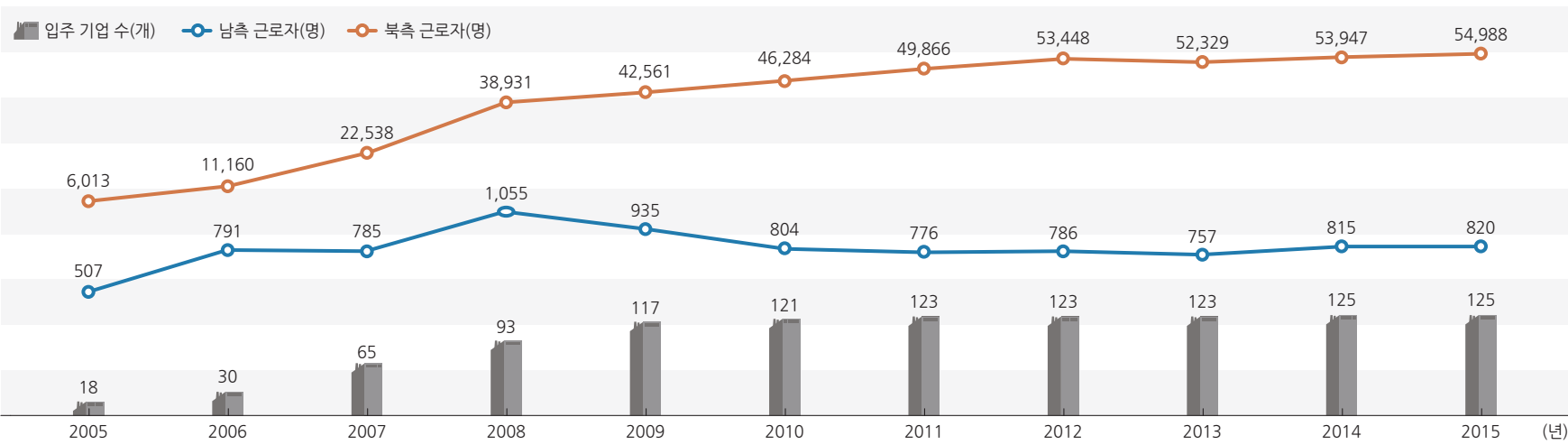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개성 공단 사업 교역액 추이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수 및 근로자 현황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00년 개최된 제1·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논의되었고,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와 도로(문산—개성)의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3년 초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임시 통행이 시작되었고, 동해선 도로 역시 2003년 2월 11일 임시 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이용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경의선(문산역—개성역), 동해선(금강산역—제진역)에 대한 열차를 시범 운행하였으며, 그해 12월부터는 경의선(문산—개성(봉동)) 간의 화물 열차 정기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경색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는데, 이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2018년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6월 26일 10년 만에 개최된 남북 철도 협력 분과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구간을 공동 점검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1월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

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 800km)을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평양 공동 선언은 군사적 적대 관계의 종식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남북 경협, 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를 담았다.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일명 '9·19 군사 합의'가 채택되었다. 9·19 군사 합의는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교류 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 기존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 2018년 10월 1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 비무장화 작업을 시작하여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남·북·유엔사 공동 검증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비무장 지대 내 쌍방 1km 이내 근접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시범 철수를 진행하여, 11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를 제외한 10개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에 대해 철거·파괴 작업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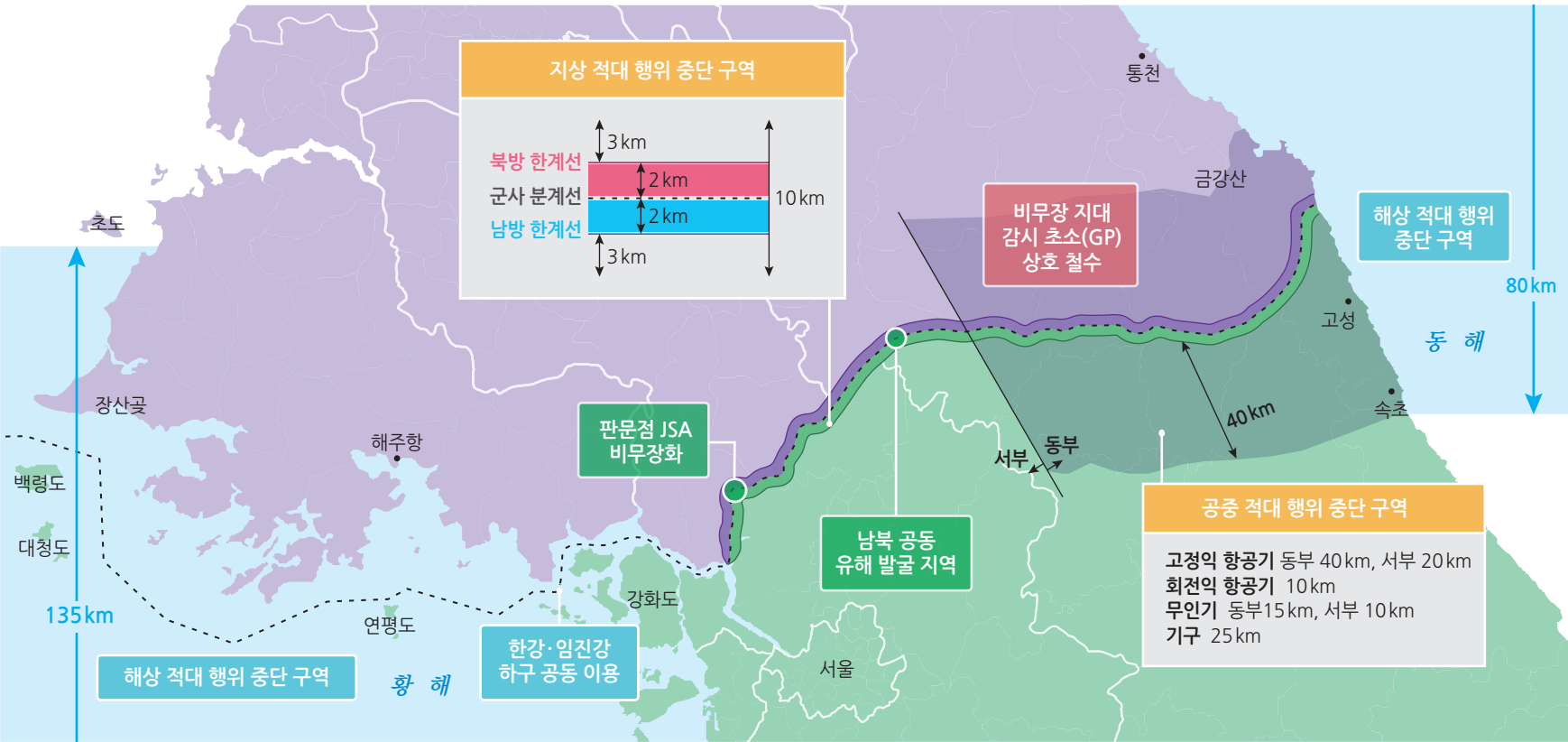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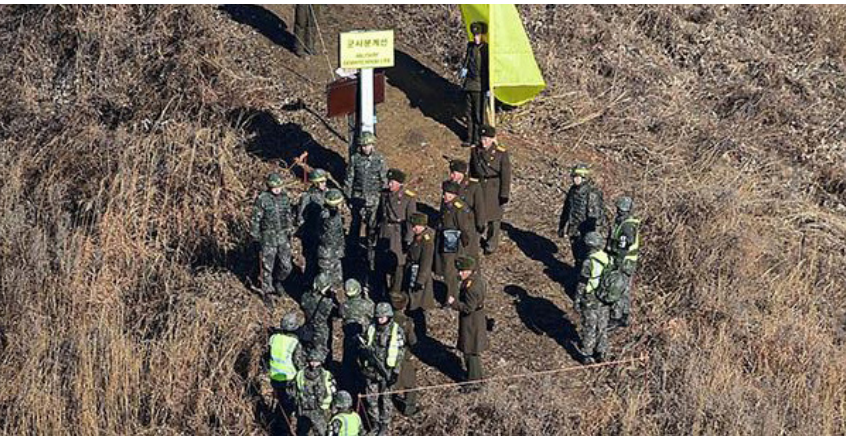


경의선 도로 출입 시설

남북 정상 회담 군사 분야 합의(2018)



철원 중부 전선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폭파 제거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시범 철수



남북 상호 검증



지뢰 제거 작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 합의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 독자 제재

에 나서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고 있다.